

202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대국민 인식조사 보고서



CONTENTS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2. 조사 설계	2
3. 조사 내용	3
4. 응답자 특성	3
5. 참고사항	4

제2장 조사결과 요약

1.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식	6
2. 인터넷상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7
3. 새로운 형태의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	8

제3장 조사결과

1.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식	10
1) 언론중재위원회 인지도	10
2) 언론중재위원회 인지 경로	11
3) 언론중재위원회 이미지	12
4) 언론피해 경험 시 대처방안	13
5) 언론중재위원회 정보 수집 경로	14
2. 인터넷상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15
1) 인터넷상 언론피해의 심각성	15
2) 인터넷상 언론피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구제방법	16
3)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필요성	17
4)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열람차단청구권 분쟁 조정 필요성	18
3. 새로운 형태의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	19
1)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통한 뉴스 형태의 영상 언론보도 해당 여부	19
2)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통한 뉴스 형태의 영상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	20

부록 설문지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본 조사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론피해구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2. 조사 설계

구분	내용
① 조사대상	▪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② 조사지역	▪ 전국
③ 조사방법	▪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조사(CATI)
④ 표본크기	▪ 800명
⑤ 표본추출	▪ 지역/성/연령별 인구수를 반영한 비례배분
⑥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표본오차 $\pm 3.46\%p$
⑦ 응답률	▪ 9.9%
⑧ 조사기간	▪ 2021년 11월 16일 ~ 2021년 11월 18일
⑨ 조사기관	▪ (주)리서치랩

3. 조사 내용

구분	내용
응답자 특성	▪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식	▪ 언론중재위원회 인지도 및 인지 경로 ▪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이미지 ▪ 언론피해 경험 시 대처방안 ▪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정보 수집 경로
인터넷상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 인터넷상 허위·왜곡보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 인터넷 매체를 통한 언론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방안 ▪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필요성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열람차단청구권 분쟁 조정 필요성
새로운 형태의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	▪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통한 뉴스 형태의 영상 언론보도 해당 여부 ▪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통한 뉴스 형태의 영상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

4.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800	100.0
성별	남성	403	50.4
	여성	397	49.6
연령	20대	122	15.3
	30대	125	15.6
	40대	156	19.5
	50대	157	19.6
	60대 이상	240	30.0
거주 지역	서울	152	19.0
	인천/경기	256	32.0
	대전/충청	80	10.0
	광주/전라	81	10.1
	부산/울산/경남	121	15.1
	대구/경북	75	9.4
	강원/제주	35	4.4

5. 참고사항

-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사용하여 전체 합이 100%에서 $\pm 0.1\%$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복수응답의 경우 전체 합이 100%를 넘길 수 있음.
- 응답자 특성 간 비교 분석에서 표본수가 30표본 미만인 계층은 해석에 유의해야 함.
- 모름/무응답 비율은 그래프와 통계표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제2장

조사결과 요약

1.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식

-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59.0%로 나타났으며, 인지 경로로는 '언론보도' (79.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그림 1 언론중재위원회 인지도 및 인지 경로

[단위: %, Base: 전체(n=800)]



-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일반국민이 갖는 이미지는 '공정하고 중립적이다'(27.3%) > '전문적이다'(18.4%) > '신뢰가 간다'(7.9%) > '이용하기 쉽다'(5.3%)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응답으로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편파적이다' 등 일부 부정적 인식이 나타났으며, 부정적 인식은 사전에 위원회를 알고 있던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그림 2 언론중재위원회 이미지

[단위: %, Base: 전체(n=800)]



※ 기타는 모름/무응답, 없음을 포함한 값임

2. 인터넷상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 인터넷상 허위·왜곡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일반국민 응답자 대부분 '심각하다'(88.0%)고 답했으며,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필요성 또한 89.4%로 높게 나타남.

■ 그림 3 인터넷상 언론피해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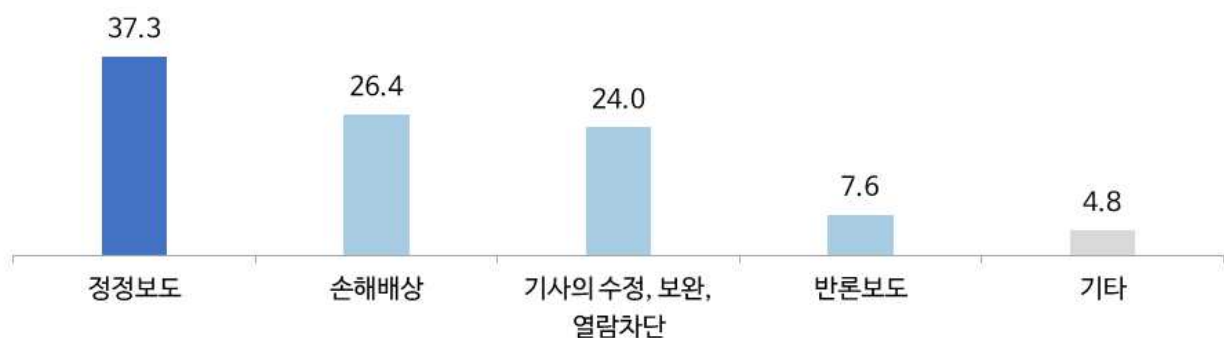
[단위: %, 전체(n=800)]



□ 인터넷상 언론피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구제방법으로는 '정정보도'(37.3%)가 가장 높았고, '손해배상'(26.4%), '기사의 수정, 보완, 열람차단'(2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림 4 인터넷상 언론피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구제방법

[단위: %, Base: 전체(n=800)]



※ 기타는 모름/무응답을 포함한 값임

3. 새로운 형태의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

-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통해 시사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영상이 언론보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일반국민 응답자 10명 중 7명(72.4%)이 '해당한다'고 답함.
- 현재 언론중재법상 조정대상이 아닌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통한 뉴스 형태의 영상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88.1%로 나타남.
 -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통한 뉴스 형태의 영상이 언론보도에 해당한다고 답한 응답자 대부분(92.4%)이 이에 대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또한, 언론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에도 피해구제의 필요성에 대해 76.9%의 높은 응답률을 보여, 언론보도 해당 여부에 대한 인식과 관계없이 피해구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5**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통한 뉴스 형태의 영상에 대한 인식

[단위: %, 전체(n=800)]



제3장

조사결과

1.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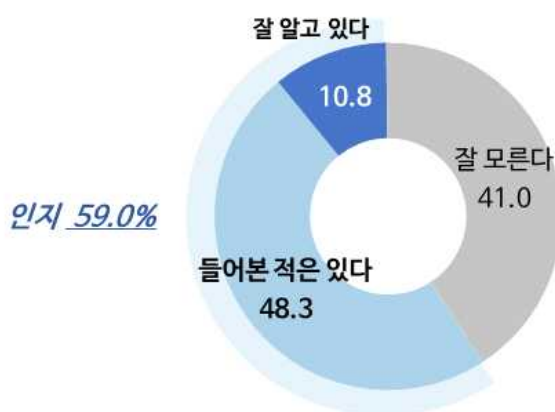
1) 언론중재위원회 인지도

□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59.0%(잘 알고 있다 10.8% + 들어본 적은 있다 48.3%)로 나타남.

□ 인지도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6 언론중재위원회 인지도

[단위: %, Base: 전체(n=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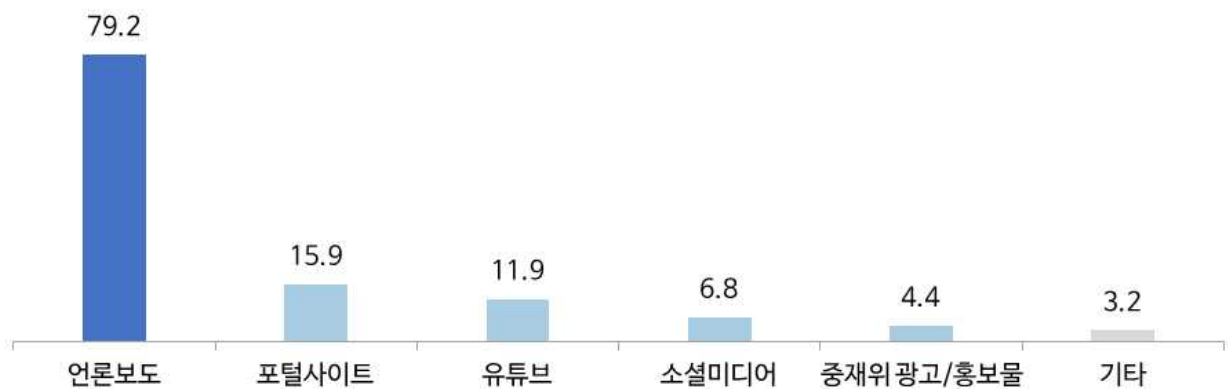
구분 (단위: %)		사례수 (명)	인지			비인지
			종합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잘 모른다
전체		800	59.0	10.8	48.3	41.0
성별	남성	403	66.3	15.4	50.9	33.7
	여성	397	51.6	6.0	45.6	48.4
연령	20대	122	23.0	0.0	23.0	77.0
	30대	125	40.0	4.8	35.2	60.0
	40대	156	67.3	13.5	53.8	32.7
	50대	157	82.8	13.4	69.4	17.2
	60대 이상	240	66.2	15.8	50.4	33.8
거주지	서울	152	59.2	12.5	46.7	40.8
	인천/경기	256	59.8	8.6	51.2	40.2
	대전/충청	80	52.5	10.0	42.5	47.5
	광주/전라	81	59.3	17.3	42.0	40.7
	부산/울산/경남	121	61.1	7.4	53.7	38.8
	대구/경북	75	60.0	10.7	49.3	40.0
	강원/제주	35	57.1	17.1	40.0	42.9

2) 언론중재위원회 인지 경로

-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알게 된 경로로는 '언론보도'가 79.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포털사이트'(15.9%), '유튜브'(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포털사이트'는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그림 7 언론중재위원회 인지 경로

[단위: %, Base: 언론중재위원회 인지자(n=472), 복수응답]



구분 (단위: %)		사례수 (명)	언론보도	포털 사이트	유튜브	소셜 미디어	중재위 광고/홍보물	기타
전체		472	79.2	15.9	11.9	6.8	4.4	3.2
성별	남성	267	78.7	15.0	13.1	8.2	4.9	3.0
	여성	205	80.0	17.1	10.2	4.9	3.9	3.4
연령	20대	28	53.6	28.6	7.1	14.3	0.0	25.0
	30대	50	74.0	24.0	4.0	8.0	0.0	0.0
	40대	105	74.3	22.9	12.4	7.6	6.7	1.0
	50대	130	82.3	16.2	10.8	7.7	5.4	1.5
	60대 이상	159	86.2	6.3	15.7	3.8	4.4	3.1
거주지	서울	90	70.0	18.9	16.7	11.1	6.7	3.3
	인천/경기	153	77.8	17.0	12.4	6.5	4.6	5.9
	대전/충청	42	76.2	16.7	7.1	0.0	9.5	2.4
	광주/전라	48	83.3	14.6	8.3	6.3	2.1	0.0
	부산/울산/경남	74	83.8	13.5	12.2	9.5	2.7	1.4
	대구/경북	45	84.4	13.3	13.3	2.2	0.0	2.2
	강원/제주	20	100.0	10.0	0.0	5.0	5.0	0.0

3) 언론중재위원회 이미지

- 언론중재위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공정하고 중립적이다'가 2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문적이다'(18.4%), '신뢰가 간다'(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응답으로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편파적이다' 등 일부 부정적 인식이 나타났으며, 부정적 인식은 사전에 위원회를 알고 있던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공정하고 중립적이다'라는 응답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8 언론중재위원회 이미지

[단위: %, Base: 전체(n=800)]



구분 (단위: %)		사례수 (명)	공정하고 중립적이다	전문적이다	신뢰가 간다	이용하기 쉽다	기타
전체		800	27.3	18.4	7.9	5.3	41.3
위원회 인지도	인지	472	25.0	19.3	9.5	5.9	40.3
	비인지	328	30.5	17.1	5.5	4.3	42.7
성별	남성	403	26.8	19.1	8.7	4.5	40.9
	여성	397	27.7	17.6	7.1	6.0	41.6
연령	20대	122	36.1	27.0	7.4	2.5	27.0
	30대	125	24.0	20.8	5.6	3.2	46.4
	40대	156	28.8	16.0	7.1	3.8	44.2
	50대	157	24.2	19.1	5.1	4.5	47.1
	60대 이상	240	25.4	13.8	11.7	9.2	40.0
거주지	서울	152	22.4	24.3	4.6	4.6	44.1
	인천/경기	256	31.6	16.0	5.9	3.9	42.6
	대전/충청	80	23.8	16.3	12.5	2.5	45.0
	광주/전라	81	33.3	13.6	7.4	8.6	37.0
	부산/울산/경남	121	26.4	14.0	9.9	8.3	41.3
	대구/경북	75	18.7	28.0	9.3	5.3	38.7
	강원/제주	35	31.4	20.0	17.1	5.7	25.7

※ 기타는 모름/무응답, 없음을 포함한 값임

4) 언론피해 경험 시 대처방안

-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응답자 10명 중 3명(29.9%)은 '피해가 크지 않다면 참고 넘어간다'는 소극적 응답을 보임. 대처방안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29.0%), '법원 소송'(22.3%), '언론사에 항의'(1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피해가 크지 않다면 참고 넘어간다'는 응답은 '위원회 비인지자', '여성',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위원회 인지자'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그림 9 언론피해 경험 시 대처방안

[단위: %, Base: 전체(n=800)]



구분 (단위: %)		사례수 (명)	피해가 크지 않다면 참음	위원회 조정 신청	법원 소송 제기	언론사에 직접 항의	기타
전체		800	29.9	29.0	22.3	15.5	3.4
위원회 인지도	인지	472	27.3	36.7	18.6	13.3	4.0
	비인지	328	33.5	18.0	27.4	18.6	2.4
성별	남성	403	26.1	29.8	26.3	14.1	3.7
	여성	397	33.8	28.2	18.1	16.9	3.0
연령	20대	122	23.8	18.9	27.0	27.9	2.5
	30대	125	16.0	20.0	39.2	20.8	4.0
	40대	156	14.1	39.1	26.3	14.1	6.4
	50대	157	31.8	36.9	15.9	13.4	1.9
	60대 이상	240	49.2	27.1	12.5	8.8	2.5
거주지	서울	152	30.3	28.3	22.4	16.4	2.6
	인천/경기	256	29.7	26.6	25.4	15.6	2.7
	대전/충청	80	32.5	23.8	18.8	20.0	5.0
	광주/전라	81	25.9	39.5	12.3	19.8	2.5
	부산/울산/경남	121	27.3	31.4	24.8	11.6	5.0
	대구/경북	75	33.3	22.7	25.3	14.7	4.0
	강원/제주	35	34.3	42.9	14.3	5.7	2.9

※ 기타는 모름/무응답을 포함한 값임

5) 언론중재위원회 정보 수집 경로

- '언론중재위원회 이용 시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얻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과반수가 '포털사이트'(55.8%)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언론 매체'(25.5%), '유튜브'(1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 '언론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겠다는 응답이 높았던 반면, 그 외 연령대에서는 '포털사이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그림 10 언론중재위원회 정보 수집 경로

[단위: %, Base: 전체(n=800), 복수응답]



구분 (단위: %)		사례수(명)	포털사이트	언론 매체	유튜브	소셜미디어	기타
전체		800	55.8	25.5	19.5	11.0	7.3
위원회 인지도	인지	472	53.8	26.9	20.3	12.1	7.0
	비인지	328	58.5	23.5	18.3	9.5	7.6
성별	남성	403	54.3	24.1	22.3	11.7	7.7
	여성	397	57.2	27.0	16.6	10.3	6.8
연령	20대	122	63.1	18.0	14.8	16.4	4.9
	30대	125	72.8	15.2	14.4	12.0	5.6
	40대	156	71.2	17.9	17.9	14.1	5.1
	50대	157	61.1	19.1	22.9	11.5	4.5
	60대 이상	240	29.6	43.8	23.3	5.4	12.5
거주지	서울	152	57.2	23.7	18.4	11.8	5.3
	인천/경기	256	57.4	24.2	18.4	11.3	6.6
	대전/충청	80	60.0	27.5	21.3	8.8	5.0
	광주/전라	81	53.1	35.8	19.8	13.6	7.4
	부산/울산/경남	121	53.7	23.1	22.3	8.3	8.3
	대구/경북	75	49.3	28.0	20.0	13.3	8.0
	강원/제주	35	54.3	17.1	17.1	8.6	20.0

※ 기타는 모름/무응답을 포함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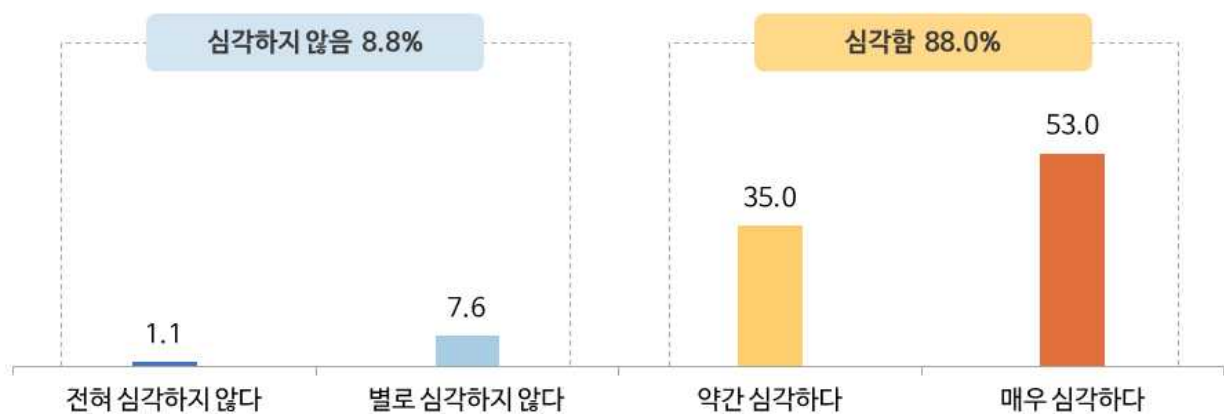
2. 인터넷상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1) 인터넷상 언론피해의 심각성

- 인터넷상 허위·왜곡보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 '심각하다' (88.0%)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8.8%로 나타남.
- 인터넷상 언론피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30-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11 인터넷상 언론피해의 심각성

[단위: %, Base: 전체(n=800)]



구분 (단위: %)		사례수 (명)	심각하지 않음			심각함		
			총합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총합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전체		800	8.8	1.1	7.6	88.0	35.0	53.0
위원회 인지도	인지	472	7.6	1.1	6.6	90.9	58.1	32.8
	비인지	328	10.4	1.2	9.1	83.8	45.7	38.1
성별	남성	403	11.4	1.7	9.7	84.9	35.5	49.4
	여성	397	6.0	0.5	5.5	91.2	34.5	56.7
연령	20대	122	13.1	1.6	11.5	85.2	44.3	41.0
	30대	125	7.2	1.6	5.6	92.8	40.8	52.0
	40대	156	3.2	0.6	2.6	94.9	39.7	55.1
	50대	157	10.2	1.3	8.9	87.3	26.8	60.5
	60대 이상	240	10.0	0.8	9.2	82.9	29.6	53.3
거주지	서울	152	7.2	1.3	5.9	89.5	38.2	51.3
	인천/경기	256	7.8	0.4	7.4	90.6	30.9	59.8
	대전/충청	80	11.3	0.0	11.3	87.5	33.8	53.8
	광주/전라	81	7.4	1.2	6.2	86.4	34.6	51.9
	부산/울산/경남	121	12.4	1.7	10.7	81.8	31.4	50.4
	대구/경북	75	8.0	4.0	4.0	86.7	49.3	37.3
	강원/제주	35	8.6	0.0	8.6	91.4	37.1	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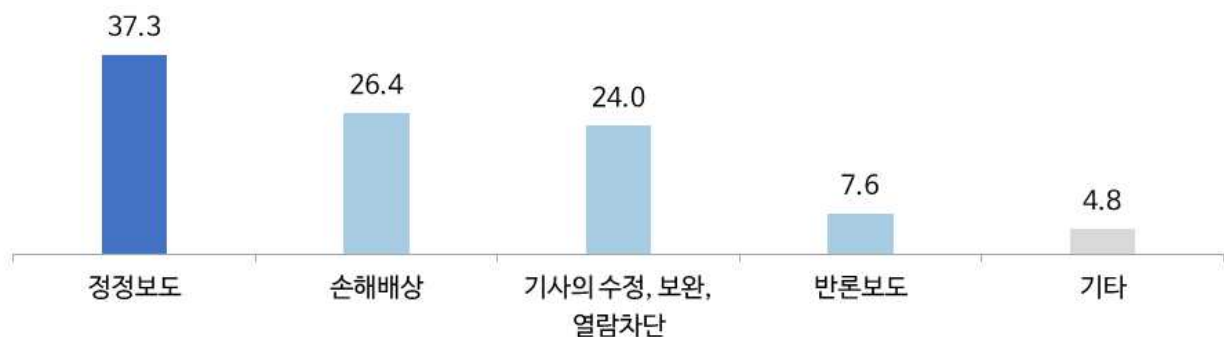
※ 잘 모르겠다(3.3%) 미제시

2) 인터넷상 언론피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구제방법

- 인터넷상 언론피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구제방법으로는 '정정보도'(37.3%)가 가장 높았고, '손해배상'(26.4%), '기사의 수정, 보완, 열람차단'(2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인터넷상 언론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 '기사 수정·보완·열람차단'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반론보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응답자 성별에 따라서는 '정정보도' 및 '기사 수정·보완·열람차단'은 '여성', '손해배상'은 '남성'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그림 12 인터넷상 언론피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구제방법

[단위: %, Base: 전체(n=800)]



구분 (단위: %)		사례수 (명)	정정보도	손해배상	기사의 수정, 보완, 열람차단	반론보도	기타
전체		800	37.3	26.4	24.0	7.6	4.8
인터넷 언론 피해	심각하다	704	36.9	27.3	24.6	7.0	4.3
	심각하지 않다	70	40.0	21.4	18.6	17.1	2.9
	잘 모르겠다	26	38.5	15.4	23.1	0.0	23.1
성별	남성	403	33.3	33.5	20.3	7.7	5.2
	여성	397	41.3	19.1	27.7	7.6	4.3
연령	20대	122	39.3	28.7	22.1	6.6	3.3
	30대	125	28.0	36.0	23.2	8.0	4.8
	40대	156	38.5	28.2	25.6	5.1	2.6
	50대	157	38.2	29.9	22.3	6.4	3.2
	60대 이상	240	39.6	16.7	25.4	10.4	7.9
거주지	서울	152	37.5	20.4	25.7	9.2	7.2
	인천/경기	256	37.5	32.4	21.9	5.5	2.7
	대전/충청	80	33.8	32.5	27.5	3.8	2.5
	광주/전라	81	32.1	28.4	23.5	9.9	6.2
	부산/울산/경남	121	41.3	19.0	24.0	9.9	5.8
	대구/경북	75	37.3	24.0	24.0	9.3	5.3
	강원/제주	35	40.0	20.0	25.7	8.6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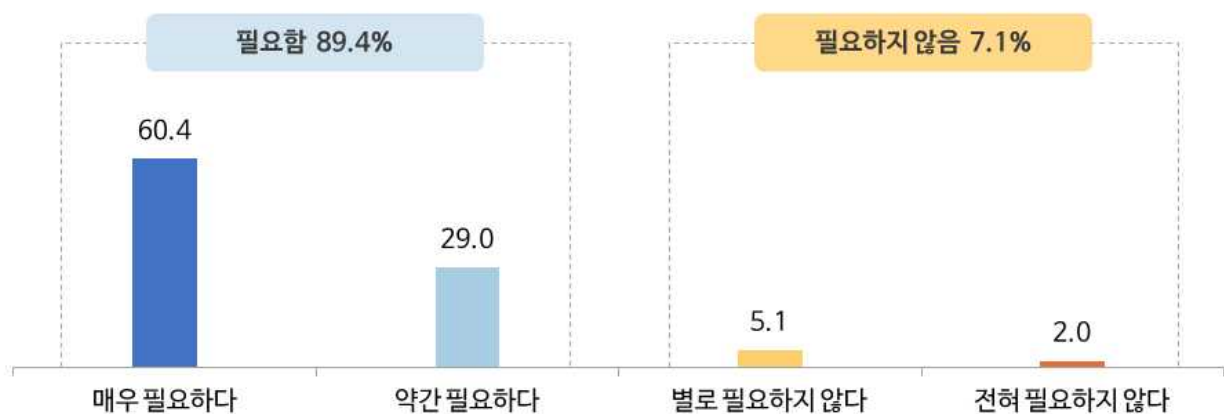
※ 기타는 모름/무응답을 포함한 값임

3)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필요성

- 인터넷상 기사의 수정·보완·열람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 '필요하다'(89.4%)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1%로 나타남.
-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인터넷상 언론피해의 심각성에 공감할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13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필요성

[단위: %, Base: 전체(n=800)]



구분 (단위: %)		사례수 (명)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종합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종합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체		800	89.4	60.4	29.0	7.1	5.1	2.0
인터넷 언론 피해	심각하다	704	92.6	64.3	28.3	5.0	3.3	1.7
	심각하지 않다	70	67.1	27.1	40.0	28.6	22.9	5.7
	잘 모르겠다	26	61.5	42.3	19.2	7.7	7.7	0.0
성별	남성	403	87.3	59.6	27.8	9.7	6.9	2.7
	여성	397	91.4	61.2	30.2	4.5	3.3	1.3
연령	20대	122	84.4	35.2	49.2	9.8	8.2	1.6
	30대	125	88.8	62.4	26.4	8.8	4.8	4.0
	40대	156	96.2	75.6	20.5	3.2	2.6	0.6
	50대	157	91.1	65.6	25.5	7.0	6.4	0.6
	60대 이상	240	86.7	58.8	27.9	7.5	4.6	2.9
거주지	서울	152	89.5	61.2	28.3	6.6	4.6	2.0
	인천/경기	256	92.2	60.2	32.0	6.6	5.1	1.6
	대전/충청	80	90.0	66.3	23.8	6.3	5.0	1.3
	광주/전라	81	90.1	60.5	29.6	3.7	2.5	1.2
	부산/울산/경남	121	86.0	58.7	27.3	10.7	9.1	1.7
	대구/경북	75	85.3	54.7	30.7	8.0	4.0	4.0
	강원/제주	35	85.7	62.9	22.9	8.6	2.9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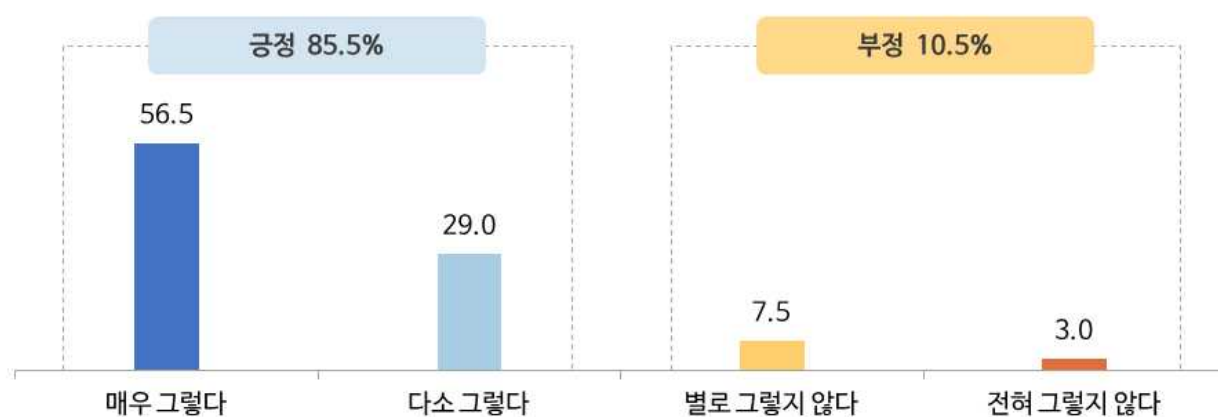
※ 잘 모르겠다(3.5%) 미제시

4)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열람차단청구권 분쟁 조정 필요성

- 열람차단청구권 관련 분쟁 조정을 언론중재위원회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85.5%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0.5%로 나타남.
- 긍정 응답은 인터넷상 언론피해의 심각성에 공감할수록 높게 나타남.

■ 그림 14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열람차단청구권 분쟁 조정 필요성

[단위: %, Base: 전체(n=800)]



구분 (단위: %)		사례수 (명)	긍정			부정		
			종합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종합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800	85.5	56.5	29.0	10.5	7.5	3.0
인터넷 언론 피해	심각하다	704	87.5	59.7	27.8	8.8	6.3	2.6
	심각하지 않다	70	70.0	31.4	38.6	30.0	22.9	7.1
	잘 모르겠다	26	73.1	38.5	34.6	3.8	0.0	3.8
성별	남성	403	82.1	54.8	27.3	14.9	10.9	4.0
	여성	397	88.9	58.2	30.7	6.0	4.0	2.0
연령	20대	122	85.2	38.5	46.7	13.1	10.7	2.5
	30대	125	83.2	51.2	32.0	12.0	8.0	4.0
	40대	156	87.8	64.7	23.1	9.0	5.1	3.8
	50대	157	89.8	65.6	24.2	7.0	5.1	1.9
	60대 이상	240	82.5	57.1	25.4	11.7	8.8	2.9
거주지	서울	152	87.5	52.6	34.9	9.2	7.2	2.0
	인천/경기	256	85.2	55.1	30.1	11.7	8.2	3.5
	대전/충청	80	80.0	62.5	17.5	13.8	10.0	3.8
	광주/전라	81	91.4	69.1	22.2	3.7	2.5	1.2
	부산/울산/경남	121	84.3	54.5	29.8	10.7	8.3	2.5
	대구/경북	75	85.3	48.0	37.3	10.7	6.7	4.0
	강원/제주	35	82.9	65.7	17.1	14.3	8.6	5.7

※ 잘 모르겠다(4.0%) 미제시

3. 새로운 형태의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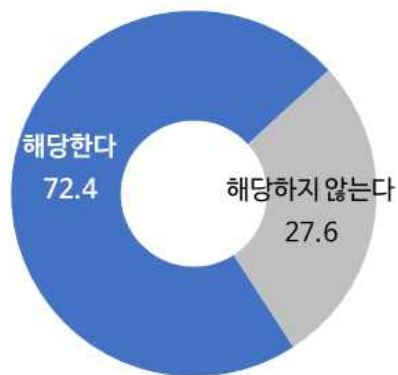
1)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통한 뉴스 형태의 영상 언론보도 해당 여부

□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통해 시사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영상이 언론보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7명(72.4%)이 '해당한다'고 답한 반면, 27.6%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언론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20대'에서 높게 나타남.

■ 그림 15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통한 뉴스 형태의 영상 언론보도 해당 여부

[단위: %, Base: 전체(n=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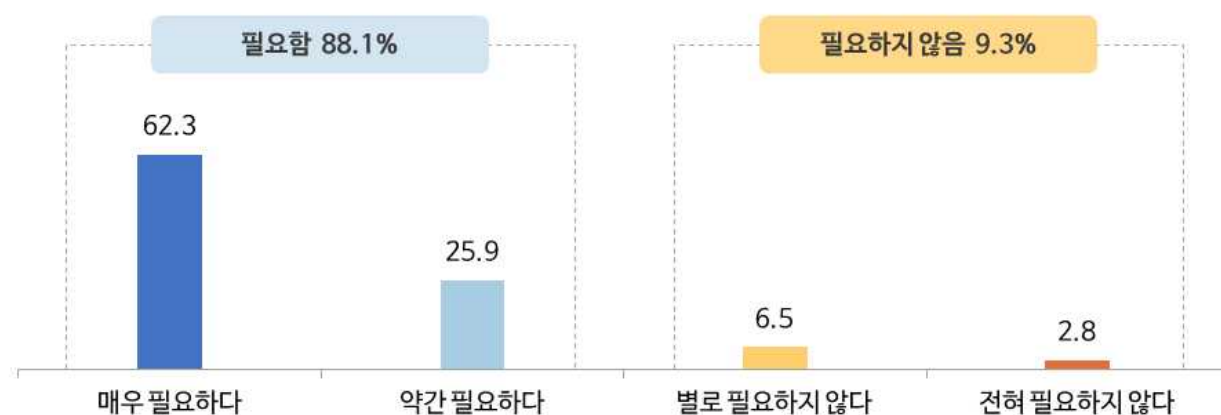
구분 (단위: %)		사례수(명)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전체		800	72.4	27.6
위원회 인지도	인지	472	72.9	27.1
	비인지	328	71.6	28.4
성별	남성	403	71.5	28.5
	여성	397	73.3	26.7
연령	20대	122	68.9	31.1
	30대	125	74.4	25.6
	40대	156	72.4	27.6
	50대	157	75.2	24.8
	60대 이상	240	71.3	28.8
거주지	서울	152	69.1	30.9
	인천/경기	256	75.0	25.0
	대전/충청	80	68.8	31.3
	광주/전라	81	76.5	23.5
	부산/울산/경남	121	71.9	28.1
	대구/경북	75	68.0	32.0
	강원/제주	35	77.1	22.9

2)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통한 뉴스 형태의 영상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

-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통한 뉴스 형태의 영상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 '필요하다'(88.1%)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3%로 나타남.
- 플랫폼을 통한 뉴스 형태의 영상이 언론보도에 해당한다고 답한 응답자 대부분이 이에 대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또한, 언론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에도 76.9%의 높은 응답률을 보여, 언론보도 해당 여부에 대한 인식과 관계없이 피해구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16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통한 뉴스 형태의 영상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

[단위: %, Base: 전체(n=800)]



구분 (단위: %)		사례수 (명)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종합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종합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체		800	88.1	62.3	25.9	9.3	6.5	2.8
해당 여부	언론보도 해당	579	92.4	67.7	24.7	5.5	3.6	1.9
	언론보도 미해당	221	76.9	48.0	29.0	19.0	14.0	5.0
성별	남성	403	86.6	61.3	25.3	11.2	7.7	3.5
	여성	397	89.7	63.2	26.4	7.3	5.3	2.0
연령	20대	122	89.3	54.1	35.2	9.8	9.8	0.0
	30대	125	88.8	57.6	31.2	9.6	5.6	4.0
	40대	156	92.9	76.9	16.0	5.8	4.5	1.3
	50대	157	90.4	66.9	23.6	5.1	3.2	1.9
	60대 이상	240	82.5	56.3	26.3	13.8	8.8	5.0
거주지	서울	152	87.5	59.2	28.3	11.8	9.2	2.6
	인천/경기	256	90.2	64.1	26.2	7.4	5.1	2.3
	대전/충청	80	85.0	66.3	18.8	13.8	8.8	5.0
	광주/전라	81	88.9	67.9	21.0	7.4	6.2	1.2
	부산/울산/경남	121	89.3	59.5	29.8	8.3	5.0	3.3
	대구/경북	75	84.0	53.3	30.7	8.0	5.3	2.7
	강원/제주	35	85.7	68.6	17.1	11.4	8.6	2.9

※ 잘 모르겠다(2.6%) 미제시

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는 “(주)리서치랩”과 공동으로 언론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의 비밀보호 조항에 의해 보호되고, 응답하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통계결과로만 제시될 것이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응답자 선정 질문

SQ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SQ2. 올해 연세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20세 미만 조사 중단)

① 20세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SQ3.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세종)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I. 기본 설문

문1. 귀하께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은 있다 ③ 잘 모른다

문1-1. (문1 ①, ② 응답자)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언론 보도(신문, 방송 등) ② 포털 사이트 ③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등)
④ 유튜브 ⑤ 중재위 광고 또는 홍보물 ⑥ 기타 ()

문2.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① 공정하고 중립적이다 ② 신뢰가 간다 ③ 전문적이다
④ 이용하기 쉽다 ⑤ 기타()

문3. 귀하 또는 가족에 대한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① 언론사에 직접 항의한다 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③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④ 피해가 크지 않다면 참고 넘어간다
⑤ 기타()

문4.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어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하게 된다면 관련 정보는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언론 매체(신문, 방송 등) ② 포털 사이트(검색, 블로그)
③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등) ④ 유튜브 ⑤ 기타()

II. 인터넷상의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문5. 귀하께서는 인터넷상 허위·왜곡보도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읽지 않음)

문6. 인터넷신문, 포털 등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구제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정보도 ② 반론보도 ③ 손해배상 ④ 기사의 수정, 보완, 열람차단 ⑤ 기타()

문7. 기존의 정정·반론·추후보도·손해배상 청구 이외에도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인터넷상의 기사를 수정 또는 보완, 열람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청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읽지 않음)

문8. 귀하께서는 언론사를 상대로 인터넷 기사의 수정, 보완,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읽지 않음)

III. 새로운 형태의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문9.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통해 정치·경제 등 시사에 관한 보도, 정보 등을 제공한다면 이는 언론보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해당한다 ② 해당하지 않는다

문10. 정치·경제 등 시사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은 언론중재법상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뉴스에 대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읽지 않음)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대국민 인식조사 보고서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발행일

2021년 12월 16일

조사기관

(주)리서치랩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내용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